월/요/광/장

김 세 곤

퇴임식, 송별회 꼭 해야 하나?

6월 30일로 공무원 생활을 마감한다. 정년이 2년 남았지만 퇴직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퇴임식을 꼭 하여야 하는가이다. 요즘 저축은행의 비리 사태와 몇몇 중앙부처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는데 나 홀로 독야청청하게 성대히(?) 퇴임식을 치를 것인지 갈등이 생기었다.

사실 정식으로 퇴임식을 하게 되면 준비하여야 할 일이 상당히 많다. 행사계획을 세워야 하고 손님도 초청하여야 한다. 플래카드, 꽃다발, 기념패 마련과 때로는 행운의 열쇠 증정, 퇴임하는 분의 행적을 사진으로 보여주기, 퇴임사와 송별사, 기념촬영, 다과준비 등 준비할 일이 많다. 그러려면 스무 명 남짓한 사무실 직원들이 업무 분담을 하여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후임자가 곧 올 것인데 직원들이 퇴임식에 신경 쓰게 하는 것도 부담이다. 또한 초청받은 노사단체와 관련 기관 등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3년간 일하였으니 미우나 고우나 행사에 참석하고 화환이라도 하나 보내는 것이 관례이다. 이 또한 폐를 끼치는 일이다.

더구나 7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역사상 처음 맞는 복수노조 시대가 되어 지방노동위원회가 신경 쓸 일이 엄청 많은데 이 시점에 정식으로 퇴임식을 꼭 하여야 하는지 정말 고민이었다.

여러 번 생각한 결과 퇴임식은 아예 안 하겠다고 직원들에게 말하였다. 그 대신 퇴임사는 꼭 하겠노라고 미리 일러두었다.

6월 월례조회에서 앞당겨 퇴임사를 하였다. 36년 6개월간의 공무원 생활에 대한 소회와 공무원의 길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것은 꿈과 변화 그리고 여유(與猶)이다.

나름대로 꿈이 있었기에 지방직 7급 공무원을 하다가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노동부에 들어왔다. 영어 실력이 변변치 못하면서도 2년간의 영국 유학과 3년의 미국 대사관 생활도 하였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호남의 역사인물에 대한 글을 쓰고 책도 냈다.

다음은 변화를 이야기하였다. 세상이 너무 빨리 그리고 정신 못 차리게 변하고 있다. 공무원도 트위터 ·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킹도 하고 세상읽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 변화를 읽어야 생존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여유다. 공직자는 노자의 '도덕경' 제15장에 나오듯이 조심하고 삼가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마치 살얼음이 언 겨울 강을 건너듯 조심하고,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경계하듯 두려워하면서 공직의 길을 걸어야 한다. 특히 노사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일이 많은 노동위원회 공무원은 항상 공정하게 일처리를 하고 구도자(求道者)로 지낼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형기 시인의 시 '낙화'를 낭송하고 퇴임사를 마무리하였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

그런데 퇴직을 며칠 앞둔 마당에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송별회를 꼭 하여야 하는지' 하는 문제이다. 직원들에게 송별회는 하겠다고 말하였지만, 반드시 저녁에 회식을 하고 서운하다고 2차로 맥주 한 잔 더 하며 노래방 가서 한 곡조 불러야 하는 것인지를 곱씹게 되었다.

사실 송별회 안 하는 일은 퇴임식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결정이다. 식사도 같이 안 하고 떠나면 후배 공무원들이 얼마나 섭섭할 것인가. 너무 몰인정하다고 뒷소리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우연히 법정 스님의 수필 '아름다운 마무리'에 나오는 글 한 대목이 눈에 들어왔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 향기와 맛과 빛깔을 조용히 음미한다. 그것은 삶에 새로운 향기와 빛을 부여하는 일이다.'

그래, 법정스님 방식으로 송별회를 하자. 사무실에서 한 잔의 차와 과자, 과일로 조촐하게 석별의 정을 나누자. 이렇게 하면 조금 아쉬워도 국화처럼 향기로운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국민참여재판 참여기

임 태 호

필자는 얼마 전 4명의 자녀를 두고 우울증을 앓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에 국선변호인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살인·강도강간·뇌물 등 중대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원할 경우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따른 심리가 진행된다.

보통 재판 당일 오전은 배심원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오후에는 증거조사 절차 및 피고인신문·검찰의 구형·변호인 최후변론·피고인 최후진술 및 판결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 제도의 큰 특징은 추첨을 통해 8명 정도의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직접 재판 절차에 참여한다는 점인데, 보통 재판 당일 오전에 첫 절차로 한 시간여 동안 배심원 선정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후보로 70~80명 정도를 뽑아 출석 통지한 뒤 재판 당일 출석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소양·편견 여부 등에 관한 문답 및 기피절차를 진행, 최종적으로 예비배심원 1명을 포함한 8명의 배심원을 확정하는 것이다.

배심원들은 유·무죄 평결과 유죄일 경우 구체적인 형량 결정까지 하게 되고 그 결정이 재판부에는 권고적 효력이 있다지만 실제로는 특히 형량과 관련해서는 거의 배심원의 의견이 그대로 존중된다고 한다.

변호인으로서는 결국 피고인에 보다 유리한 정상 참작을 해 줄 배심원을 구성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배심원들도 유·무죄 판단은 물론 유죄일 경우 실형선고 혹은 집행유예로 석방할 것인지 여부까지 결정을 하게 되므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이 지배한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배심원들이 유·무죄 판단 및 형량 결정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배심원들의 평결에 재판부가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권고적 효력에 그치도록 돼 있다. 사실상 안전판을 마련해 놓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참여재판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등으로 아직은 위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최근 대부분의 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와 해당 재판부의 결론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필자가 참여한 사건의 경우 7명의 배심원 중 6명이 집행유예 의견을 제시했고 법원이 그 의견을 존중해 피고인은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당일 석방됐다.

일반 재판 절차에서 직업법관이 폭행치사에 사체유기까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석방했다면 형량에 대해 의문을 가질 여지도 많았던 사건이었다.

하지만,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양형 토의 끝에 내린 결론이 집행유예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석방한 것인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판결에 대해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그동안 국가는 일반 국민을 단순한 법치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사법 제도를 운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민간 조정 제도의 활성화, 배심원 제도의 도입 등으로 이제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사법 불신이 해소되고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며 국민 각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문화가 정착되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혹여 독자 여러분이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됐으니 법원에 출석해 달라는 취지의 우편물을 받는다면 일일 법관으로서 적극 참여해 보기를 간곡히 권유하고 싶다. 그 자체 법치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는 점은 덤으로 생기는 이득이 될 것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기 고

광주, '친환경 그린카'의 미래

하 태 선

자동차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으로는 엔진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지구온난화 및 산성비, 에어컨 냉매로 인한 오존층 파괴 문제를 비롯하여 폐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리싸이클링 문제 등이 있다.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한 대체동력 확보, 안전규제 강화, 환경규제 심화, 차량지능화 요구 증대 등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서 자동차 산업의 메가트랜드는 친환경, 고안전, 고감성, 편의성 향상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규제 강화, 고유가, 기존시장의 포화 등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 환경변화 속에서 고효율, 저연비, 고안전 측면의 소비자 성향을 고려할 때 '친환경 고효율 그린카'로 우리나라 자동차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친환경을 지향하는 '그린카'는 일반적으로 플러그를 꽂아 충전하는 전기차(EV), 엔진으로 전기를 충전하는 하이브리드(HEV), 수소와 산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차(FCEV), 그리고 디젤엔진을 사용하지만 배출가스가 적고 연료효율이 탁월한 클린디젤차(CDV)로 분류된다.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광주시는 2006년 2월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을 지역산업 로드맵에 반영하고 산학연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여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그리고 2010년 8월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면서 광주가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에는 앞으로 5년간 1871억 원을 투입하여 2개 센터(디젤기술전문센터, 핵심부품소재센터)를 구축하고 43종의 장비구축, 21개 기술개발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은 관내 자동차 구조개선 및 친환경 클린디젤 자동차 부품산업을 집적하고 클린디젤 핵심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 6월 16일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사업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클린디젤자동차 등 그린카 인프라 구축, 주요핵심부품 국산화 및 부품성능향상 등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지원 등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의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할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였다.

지역 내 중소부품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대물류인 샤시, 문, 차체, 의장, 구동 모듈 시트 등에 부착되는 다양한 부품을 전자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전장모듈과 접목하고, 그린에너지 기술을 융합한 친환경고연비 자동차 생산에 핵심요소인 클린동력 시스템 및 부품, 청정 흡배기 계통, 경량소재, 초고연비 제어부품을 개발하도록 기존 부품 모듈기술에 녹색기술을 접목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자동차부품업체를 영세 하청단계에서 탈피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그린카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의 성공은 친환경 자동차 부품시장의 확대에 따른 제조와 인력수요 등 기하급수적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광주를 세계적인 그린카 부품도시로 육성시키려는 그린카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련 업계 및 관계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광주시 전략산업과장〉

청소년 탈선 막게 제대로 된 학교 음주교육 필요

얼마 전 밤 늦은 시간 동네 편의점 앞에서 고등학생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소리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술 소비량이 세계적인 수준이라지만 청소년들까지 그런 것을 보니 너무 걱정스러웠다.

가장 큰 문제는 어린 나이 때부터 음주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외국의 음주문화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목이 많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감독하에 포도주와 같은 술을 마시는 것이 허용된다.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음주예절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교육받은 자녀는 살아가면서 알코올을 일방적으로 탐닉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음주교육에 대해 고등학교에서는 무조건 통제하고, 대학교에서는 방관한다. 결국, 이같은 통제와 방관은 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대학교에 입학해 신입생 환영회에서부터 폭탄주를 마시며 해마다 몇 명씩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남긴다.

수많은 청소년 사건·사고와 성범죄가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걸 부모들이 알았으면 한다. 음주교육을 제대로 시킨다면 청소년의 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정에서는 물론 고교에서도 술의 종류, 알코올 함량, 술 마시는 방법, 알코올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 등 음주의 폐해를 가르쳐야 한다. 학교에서도 성교육을 시키는 만큼 음주에 대한 적절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재진·광주시 북구 생용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 설

법정 전입금조차 제대로 안내는 지역 사립대

광주·전남 주요 사립대의 법정부담 전입금 납입률이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공개한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전국 149개 사립대 법정부담금 납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 7개 주요 사립대의 납입률은 29.2%에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 납입률 46%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3년간 내지 않은 전입금이 164억 원에 이른다니 그만큼 부담을 학부모에게 부당하게 떠넘긴 셈이다.

특히 광주대와 광주여대의 평균 법정부담금 납입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지역 최대 사립대인 조선대도 겨우 13%에 불과했다. 반면 동신대는 100%를 완납했고 광신대와 남부대는 80% 이상을 납입해 대조를 이뤘다.

과중한 등록금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대학들은 정부의 교육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야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기부문화도 활성화돼야 대학 재정의 학부모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대학이 그런 요구를 하려면 스스로 자기 책임부터 다하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법이 정한 전입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재단이 제 주머니는 꽁꽁 싸맨 채 국고에만 기대거나 학부모·학생들만 쥐어짜는 꼴이다. 더욱이 재단 전입금이라고 해야 전체 수입의 5%에도 못 미친다. 3분의 2를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쥐꼬리만한 전입금마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것은 법 준수의 문제를 떠나 부도덕한 자세다.

재단이 부담해야 할 예산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학교 재정상태는 악화되고, 이는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입금조차 부담하지 못할 대학이라면 구조조정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혈세의 낭비를 막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활개치는 '가짜 장애인' 두고만 볼 건가

시중에 '가짜 장애인'이 활개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의사와 브로커가 짜고 수백 명의 비장애인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사실을 경찰이 적발했다고 한다. 특히 브로커 중에는 보건소 직원이 포함된데다 이 병원 외 다른 1~2곳의 병원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최근 서울 모 신경외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진료기록부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 2년간 이 병원에서 1400여 명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이 중 대부분은 브로커를 통해 건당 200만~300만 원을 주고 허위 장애진단을 받은 가짜 장애인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은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려면 환자가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야 하지만 의뢰인에게 장애진단서를 떼 주는가 하면 병원을 방문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택배로 보냈다고 하니 이런 파렴치한 의사가 또 있는가.

하지만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장애진단 의뢰자들에게 더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에게 부여된 혜택을 노려 법과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데 있다. 장애인이면 LPG 차량 구입과 유류, 통신요금, 차량 등록세와 취득세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장애 주차장에 차를 대지 못하고 몇 번이고 빈 곳을 찾아 겨우 주차하는 일반인의 심경에선 그저 말 문이 막힐 따름이다.

경찰은 해당 의사나 브로커들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죄를 물어야 하며 개연성이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또 가짜 장애인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한 무거운 책임을 묻고,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계 당국은 장애 관련 업무의 시스템 부실이나 허점 등에 대해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아리랑

우리 민요 가운데 민초들의 애환이 가장 꾸밈없이 투영된 노래를 꼽는다면 아무래도 아리랑이 으뜸일 것이다. 삶의 희로애락이 백일하에 드러난 속살만큼이나 가식과 위선 없이 질박하게 묻어난다. 민족 감성의 저수지라 할 만하다.

"가는 임 허리를 아드득 잡고 하룻밤만 자고 가라고 통사정을 하네"(진도아리랑) "아주까리 동백아 여지 마라, 누구를 괴자고 머리에 기름"(강원도아리랑)

전 세계 어디서 만나든 가슴 뭉클하게 한민족의 동질성을 확인시켜주는 가락도 아리랑이다.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을 기억하게 해주는 아이콘이기도 하다. 지난달 가수 이승철이 6·25 참전 프랑스 노병들을 초청해 심금을 울린 노래도 아리랑이었다.

종류도 다양하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는 가사의 본조(本調) 아리랑에 이어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정선아리랑 등 각 지역 특색에 맞게 개조된 별조(別調)아리랑은 50종이 넘는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한국 교민들이 거주하는 이국땅에서도 변조된 아리랑이 불려진다. '한국의 100대 민족문화상징'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장 널리 불려지는 민족의 노래'로 아리랑이 포함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중국이 아리랑을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민속학계가 들끓고 있다. 동북공정의 하나이자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예비작업일 수 있다는 경고다. 무엇보다 수년 전부터 이런 가능성이 제기돼 왔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문화관광부는 2008년부터 아리랑세계화사업팀을 운영해왔지만 결국 중국에게 선수를 빼앗긴 셈이다. 뒤늦게 정병국 장관은 "올해 안에 국내 아리랑 전체를 수집해 내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지 않으려면 보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